



주간 통일정세

2010-1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리용철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사망(4/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리용철 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 동지는 심장마비로 2010년 4월26일 0시 20분에 여든 한 살을 일기로 서거했다”며 “리용철 동지는 오랜 기간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인민 군대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해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리 제1부부장은 1980년대 초반 인민무력부 작전국장을 거쳐 1986년 조사부장으로 노동당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1994년부터 노동당에서 군사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아왔음. 과묵하고 세밀한 작전참모형인 리 제1부부장은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못해 김경옥 제1부부장이 업무를 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됨.
- 北김정일, 국립연극단 ‘산울림’ 관람(4/2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방송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립연극단의 경희극(輕喜劇) ‘산울림’을 관람했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경희극 ‘산울림’은 식량증산과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활동을 주제로 1960년대 창작된 작품으로, 이번에 국립연극단에 의해 재창작됨.
 - 김 위원장은 이 작품의 재창작에 ‘만족’을 표시하고 “선군시대 문학 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하였으며, “연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사회를 주체 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며 국립연극단의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에 지침이 될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 수행

- 北김정일, 정찰총국 시찰…‘천안함 의혹’ 관련주목(4/27,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창설기념일(4.25, ‘건군절’)을 맞아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의혹의 중앙에서 있는 정찰총국 지휘본부를 시찰한 것으로 확인
 - 김 위원장이 정찰총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그 이전에도 정찰국 시절인 2005년 5월 ‘제8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정찰국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한 것이 유일
 - 정찰총국은 작년 2월 기존의 인민무력부 정찰국에 노동당의 ‘작전부’(공작원 침투루트 개척·테러 담당)와 ‘35호실’(대외정보 수집 담당)을 흡수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함께 북한 군부의 ‘3대 권력기구’로 꼽힘.

- 北, 당원 교육서 ‘軍통과한 보복’ 언급(4/27, 데일리NK)
 -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북한 내 공장의 당원 사상교육 자리에서 “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과한 보복을 안겼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짐.
 - 데일리NK는 27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 24일 온성군 A기업소(공장)의 당원 ‘토요 정세강연회’에서 ‘당 세포비서’가 “최근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과한 보복을 안겨, 남조선이 우리의 자위적 군사력에 대해 국가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매체는 또 “‘건군절’(인민군 창립기념일.4월25일)을 맞아 열린 강연회는 ‘우리 군사력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는 내용으로 진행됐다”면서 “당 세포비서가 남한 군함 침몰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당원들은 소문으로 나돌던 이 사건이 실제 있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이어 매체는 신의주 등의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민 열에 일곱은 남한 함정의 침몰 소식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북한 해군이 침몰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소문이 퍼져도 특별히 단속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북한 당국이 외부에는 자신들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인민군의 전과를 알리려는 것 같다”고 밝힘.
 - 한편 북한 특수전부대 장교 출신인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정일 정권의 폭압정치 고발, 탈북 엘리트의 증언’ 행사에서 “평양시 상원군에 있는 38육전여단 대대 참모부까지 자료가 내려왔는데, 천안함 사건이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인민군의 위력을 남조선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보여준 쾌거’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고 밝힘. 임 회장은 이어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주 최근 이 부대를 전역하고 중국에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북한 당국이 천안함 사



건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임.

- 北김중린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 사망(4/28,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 중앙위 비서인 김중린이 심근경색으로 28일 86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힘.
 - 1923년 평안북도 벽동군(현재 자강도 우시군)에서 태어난 김 비서는 해방 전 만주지역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뒤 함경북도 당 위원회에서 부장을 지냈고 1954년 당 부부장으로 중앙당에서 일을 시작
 - 그는 1969년 대남담당 당 비서에 임명돼 1972년 5월에는 평양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비밀협상을 갖기도 했으며 1978년에는 당 통일전선부장을 겸함.
 - 1985년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해임되면서 권력핵심부에서 밀려나 1986년에는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에 임명됐고 1987년 공보위원장을 맡음. 1988년 잠시 대남담당 비서를 지내다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를 맡아왔는데, 근로단체 담당 비서는 직업총동맹이나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북한의 단체들을 지도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역할을 해음. 또한 1962년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대의원직을 유지해 왔음.
 - 통신은 김 비서의 사망 직후 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동명의로 부고를 발표하고 “김중린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 밝혔다고 전함.
 - 북한은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를 위원장으로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진 당 통일전선부장, 강관주 내각 225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 40명으로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시신을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하기로 결정
- 北김영일, 노동절 행사서 “南근로자들과 연대”(5/1, 조선중앙통신)
 - ‘5.1절’(노동절) 12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반미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근로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보도
 - 김 내각총리는 이날 평안북도 신의주시 락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오늘의 인민생활 대고조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과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유압식 굴착기 등 건설 및 광산 관련 중장비를 생산하는 락원기계연합기업소는 김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현지지도 한 곳으로, 올해 북한이 ‘희천속도’를 내세우며 노력동원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현장에 굴착기를 공급
- 이날 보고대회에는 로두철 내각부총리, 김병팔 조선직총 중앙위원장, 조병주 기계공업상, 평안북도의 당·정권기관·근로단체 책임일꾼들 등이 근로자들과 함께 참석
- 한편 중앙통신은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과 국가 간부들도 국가과학원, 김중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 지방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현지 근로자들과 체육오락행사를 가졌으며, 또 평양의 대성산 남문 앞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이, 개성문 광장에서는 국립민족예술단이, 만경대유희장에서는 평양교예단이 각각 공연

● 김정일 방중입박 징후…단둥엔 긴장감 /

랴오닝 성장 단둥역 진입…1급 경비(5/2, 연합뉴스)

- 北 김정일 방중 예상경로: 평양-신의주-단둥-선양-베이징
- 중국 랴오닝(遼寧) 성장을 비롯한 성 지도부가 2일 오후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의 역사에 진입, 노동절 황금연휴가 시작된 1일부터 2일까지 단둥시에는 공안국이 1급 경비체제를 가동, 경비를 강화하고 압록강변 호텔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
- 단둥의 한 소식통은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 성장과 부성장급을 포함한 성 지도부 5~6명이 이날 오후 3시께 단둥에 도착, 지도부 전용 호텔인 단둥빈관을 거쳐 단둥 역사에 오후 5시께 진입했다”고 전함.
- 단둥의 다른 소식통은 “단둥 공안국이 1급 경비체제를 가동, 단둥역 등 주요 시설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으며 압록강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투숙객을 철수시키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실제 이날 오후 5시부터 단둥 역 광장에 경찰 차량 5대와 경찰관 20여 명이 배치돼 차량 출입을 막는 등 경계가 대폭 강화됨.
- 압록강 철교인 북중 우의교 주변에도 이날 오후부터 경찰과 군인들이 배치, 단둥 역사와 붙어 있어 역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단테(丹鐵)호텔은 이날 출입이 봉쇄돼 직원들조차 출입을 못하고 있음.
- 북중 우의교가 가장 잘 보이는 중렘호텔도 1일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돼 투숙객들을 내보내고 있다. 또 투숙객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받아들인 예약도 취소, 1층 카운터와 커피숍에서는 20여 명의 경찰이 서성이는 장면이 목격됨. 과거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 1~2일 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예약을 받지 않았음.



■ 김정일 동향

- 4/25 인민군 창설기념일(4.25, '건군절')을 맞아 정찰총국 지휘본부를 시찰
- 4/27 국립연극단의 경희극(輕喜劇) '산올림'을 관람(4/27, 중방; 평방)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부장이 수행
- 4/28 방중인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의 공연 관람(4/28, 중통)
 -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동행
- 4/29 김정일, 4/29 故 김중린(黨 비서) 빈소에 화환 전달(4/29, 중통)
- 5/ 1 노동절을 맞아 북한 은하수관현악단과 러시아21세기관현악단의 '5.1절 합동음 악회'를 관람(5/2, 중방)
 - 발레리 수히닌 대사를 비롯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공연을 관람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4/26 김父자의 남포혁명학원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4/27, 중방)

나. 경제

- 북, 개인 부동산임차 허용...부동산관리법 제정(4/28,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12월 중순 부동산관리법 제정 사실을 보도했지만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고만 밝힘.
 -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민주조선'(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기관지)의 '부동산관리법' 법규 해설 시리즈(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3회에 걸쳐 다룸)를 통해 확인됨.
 -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돼 있는 북한에서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가의 주택공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동산 암거래 시장이 차츰 커진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06년 4월 열린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4차 회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와 사용료 징수 방침을 밝힌 뒤 당해 연도 예산안에 '부동산사용료'라는 재정수입 항목을 신설
 - '민주조선'에 따르면 새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을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다른 기관·사업소·단체·국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고 명시

- 이 법은 또 부동산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사용료를 재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했고, 부동산의 등록 절차를 그 주체에 따라 ‘자체등록’(이용기관·기업소·단체)과 ‘국가등록’(관리기관)으로 이원화해 “현물과 화폐”(부동산 정보와 가격) 두 가지를 등록하되 ‘화폐’가 불가능하면 ‘현물’만 하도록 규정

● 北남흥화학기업소, 석탄 이용해 비료생산(4/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갖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을 본격 가동했다고 전함.
- 리무영 화학공업상은 조업사에서 “남흥의 노동계급이 비료와 화학 제품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 통신은 29일 발표한 보도에서 “무연탄 가스화의 완성에 의해 나프타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방식보다 원가를 2배 이상으로 줄이면서도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고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을 추동하게 됐다”고 평가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국가과학원, 새 형의 ‘공기정화소독기’ 개발 및 평양의학대학병원, 평양 제1, 2인민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의 수술실 등에 도입중 (4/27, 조선신보)
- 北 리과대학에서 개발한 새로운 ‘탄광막장감시체계’,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의 석탄생산 정상화에 기여(4/27, 조선신보)
- 北 농업화학연구소, 병해충·잡초의 특성과 농약의 합리적 선택적 용을 위한 다매체편집물 ‘실용농약’ 전자편람 연구 완성(4/27, 중방)
- 조선중앙통신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무연탄가스화공정 완성 및 국내자원에 의거한 비료생산 돌입” 보도 발표(4/29, 중통)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 공정 조업식, 4.29 김영일
 - 최태복·김기남·리무영(화학공업상/조업사) 등 참가下 현지(平南) 진행

다. 군사

- 북, 천안함사건 직후 평양서 방공훈련(4/28, 데일리NK)
 - 평양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평양시 당위원회 민방위부 주도로 교도대와 노동적위대 대원들이 참여하는 반항공



훈련이 평양 일대에서 벌어졌다”면서 “유사시 공습에 대비한 평양시민들의 방공호 대피훈련도 함께 진행됐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또 “교도대는 평양의 고사포 진지에 모여 진지 공격 가상 훈련을 했고, 노동적위대는 탄약고 등 주요 시설에서 경계훈련을 했다”면서 “평양시민들의 경우 시내 ‘제3방송’과 구역 보안소 사이렌이 울리면 인민반, 기업소별로 지하철역이나 지하방공호로 1시간씩 대피했는데, 사이렌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가운데 매일 한 번씩 다른 시간에 울렸다”고 설명함.

라. 사회·문화

- 北선원 24명 탑승 화물선 中해역서 좌초 후 구조(4/27, 중국국제방송)
 - 방송은 북한 선원 24명이 탑승한 세네갈 국적 화물선 ‘금룡호’가 중국 산둥해역에서 좌초됐다가 중국 측의 도움으로 구조됐다고 전함.
 - 이 방송은 “27일 오전 세네갈 국적 금룡호 화물선이 산둥 해역에서 태풍으로 좌초했다”며 “선상에는 24명의 조선(북한)선원들과 6천t의 물유리가 선적돼 있었다”고 밝힘.
 - 이어 “구조신호를 받은 산둥 래주 변방검사소의 관병들이 신속히 출동해 사고지역 해상에 도착해 대마력 바지선을 동원하고 변방검사소 전사들이 와이어줄로 화물선을 연결한 후 좌초한 선박 및 선원과 화물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덧붙임.
- 北, WHO 지원 원격진료서비스 개시(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 원격진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함.
 - 이날 평양의 김만유병원에서는 방북중인 마거릿 찬(WH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병원과 각 도 인민병원 사이에 연결된 원격진료서비스 운영개시행사가 열림.
 - 중앙통신은 “리봉훈 보건성 부상은 행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협조로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서비스)가 수립된 데 대해 기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며 “봉사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중앙과 도급 병원들 사이에 컴퓨터 망(네트워크)에 의한 먼거리 영상협의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대책을 신속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됐다”고 소개
 -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의 운영은 산간지대가 많은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보기술을 이용해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확대하려는 것은 훌륭한 구상”이라고 언급
 - 평양의학대학병원, 조선적십자병원과 함께 북한의 ‘3대 병원’의 하나로 꼽히는 김만유병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협의체와 원격원진단협약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정보



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오래 전부터 원격진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짐.

● 9년 만에 온 WHO사무총장…北뜨거운 관심

(4./26-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노동신문)

-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장으로서 9년여 만에 방북한 마거릿 찬 사무총장에 대해 북한 언론매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
- 26일,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대외 라디오방송)이 찬 사무총장 일행이 평양에 도착해 북한 정부가 환영 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함.
- 27일,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오후 찬 사무총장 일행의 금수산기념궁전(고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곳) 방문 소식을 전하였으며, 중앙통신은 찬 사무총장이 평양 김만유병원에서 열린 ‘먼거리 의료봉사 체계’(원격진료) 행사에 참석하고 박의춘 외무상을 예방했다는 소식을 별건 보도로 전함.
- 28일, 중앙통신, 평양방송, 노동신문이 찬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표적 산부인과병원인 ‘평양산원’과 주체사상탑, 황해북도 중화군 룡산리 인민병원 등을 방문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고 보도
- 특히 노동신문은 28일과 29일 연속해 찬 사무총장의 북한 내 동정을 기사로 다룸.

● WHO 사무총장 “北 보건의료 개선 인상적”(5/1, 연합뉴스)

- 지난 26일부터 (일정을 하루 연기하여) 29일까지 방북을 마치고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복귀한 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컨퍼런스콜)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WHO와 한국정부가 함께 북한 의료 인력 및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신뢰 구축에도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고, 병원 내 감염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공중보건상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 WHO가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과 말라리아 예방 사업 역시 개선됐다”고 평가
- 북한 당국의 신종플루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좋은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전체인구 2천400만 명 가운데 10% 정도인 200여만 명 분의 백신이 북한에 공급됐다”고 밝힘.
- 또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2008년과 2009년에 북한 내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함.
- 그러나 “의료 관련 기간시설과 장비의 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약품과 의료용품 등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북한 정부 역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영양실조 등의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영양 개선과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에 좀 더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 北축구대표팀 짐바브웨 전지훈련, 망명우려 때문(4/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막바지 전지훈련 장소로 남아공 대신 짐바브웨를 선택한 이유는 선수나 임원의 망명 기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
 - 방송은 짐바브웨 교육스포츠예술문화부 등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은 축구대표팀 선수와 임원들이 남아공에서 전지훈련을 하면 망명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전함.
 - 북한과 짐바브웨는 1980년 4월 수교한 이후 고 김일성 주석과 무가베 대통령 사이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북한은 짐바브웨에 다년간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군사원조도 제공해 옴.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김만유병원과 각 도 인민병원들 사이에 수립된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의 운영개시행사 진행(4/27, 중통)
 - 이봉훈 보건성 부상, 세계보건기구(WHO) 총국장 등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최첨단수준의 교육과학정보봉사 중심 기지로 꾸러졌다고 선전(4/28,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상하이엑스포...모습 드러낸 북한관(4/26, 연합뉴스)
 -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도 폐쇄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이 상하이엑스포에 엑스포 사상 처음 참가
 - 시험운영을 통해 드러난 엑스포 북한관은 한국관과 100m가량 떨어진 곳의 1천㎡ 부지 위에 중국이 건설해 제공한 임대관에서 ‘평양의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을 맞고 있음.
 - 북한관은 흰색 바탕의 외벽에 ‘조선’ ‘DPR Korea’가 북한기와 함께 그려져 있어 다소 소박한 모습임. 단층인 1층 전시공간을 들어서면 왼쪽에 대동강과 평양 시내가 나오는 대형 사진과 4.5m 높이의 주체사상탑 축소모형이 있고, 또 옆에는 대동강의 모습을 형상화해 그 위로 돌다리를 만들어 놓았으며 맞은편에는 정자와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현한 동굴이 있음. 전시장 중앙에는 분수대와 흰색 군상 조각



상이 설치돼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왼쪽 높은 곳에 대형 TV가 설치돼 고 김일성 주석의 현화장면 등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5대의 작은 TV를 통해 평양의 역사문화, 건축, 생활 등을 소개하고 있음.

- 北, 엔지도 관광 비자 발급 개시(4/26, 길림일보)
 - 신문은 북한 조선관광사 엔지대표처가 지난 13일부터 엔지에서 비자를 발급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룡징(龍井)시 썬허(三合)통상구를 출발, 북한 청진에 도착한 뒤 전세기로 평양으로 가는 북한 관광 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북한 변경 일대를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변경 관광은 룡징 등 중국 변경도시에서 발급하는 변경관광 통행증만으로도 가능했지만 평양 등 북한 내륙을 관광을 하려면 반드시 선양(瀋陽)북한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을 밟아야 했음. 이 때문에 북한 관광에 나서는 중국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선양에서 고려항공을 타거나 단둥(丹東)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가는 열차를 이용해 왔음.
 - 신문은 또 룡징시가 그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던 북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연변주의 8개 시와 현 거주자는 물론 외지인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로 썬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 칠보산 등을 관광하는 변경 관광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당시 북·중 양측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2006년 금지한 자국민의 북한 단체 관광을 지난 12일부터 전면 허용했음.

- 北, 앙코르와트에 전자박물관 건립 추진(4/26, 연합뉴스)
 - 캄보디아 문화부 장관은 북한의 만수대 해외사업부가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사원 역사를 보여주는 전자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북한은 아프리카 세네갈에도 49m 높이의 조형물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지은 바 있는데 조형물 제작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토지매각 등이 논란을 야기했다.

- 방북 스위스 연방의원 ‘北 경제, 한계상황’(4/30, 연합뉴스)
 - 이달 초(4.6-4.10) 북한을 방문한 스위스 연방의회 올리히 솔리에 의원은 “(거리에서 본)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북한 경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함.
 - 그는 독일어 일간지 블리크(Blick)와의 인터뷰에서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매우 우울한 분위기를 느꼈다면서 “20층짜리 고층건물에 4층까지만 물이 공급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열악한 에너지 사정을 전함.



- 北, 억류 미국인 고프 씨, 가족과 통화 허용(4/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뒤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30) 씨가 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고 전함.
 - “지난 6일 재판을 받고 현재 교화 중에 있는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고프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가족들과 전화연계를 간청해온 점을 고려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그가 30일 전화를 하도록 허용해줬다”면서 “앞서 교화 중에 있는 고프에 대한 주조(주북)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접촉이 있었다, 접촉에서 고프는 청원서를 넘겨주었다”고 덧붙였다.
 - 고프 씨는 재판을 통해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고교무상화 놓고 조총련 내부 갈등(5/2, 산케이신문; 연합뉴스)
 - 조총련(재일 조선인 총연합회)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면서 내분을 겪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
 - 신문은 조총련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온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가 무산되면서 일본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선하자는 개혁파와 현재 교육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구파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고 전함.

- 이스라엘 “北, 이란에 미사일 밀수출” 비난(5/22, 연합뉴스)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면세점이 돼왔다”며 이란에 미사일을 몰래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
 -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무기가 북한에서 이란으로 유출된 뒤 다시 이란에서 레바논의 무장단체와 시리아로 옮겨지고 있다고 주장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駐北 필리핀 新任대사 「프란시스코 엘. 베네딕토」신임장 접수(4/26, 중통)
- 김영남, 토고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4/26, 중통)
- 김영남, 駐北 신임 자메이카 대사에게서 신임장 접수 및 담화(4/27, 중통)
- 박의춘 외무상, 駐北 인도 新任대사 「프라타프 싱」과 담화(4/28, 중통)
- 김영남(단장) 등 北대표단,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막행사 참가차 4/29 특별기로 중국 향발(4/29, 중통)
 - 오수용 내각 부총리, 김성기 외무성 부상 등 동행



3. 대남정세

- 북 '우리도 금강산 관광의 피해자다' 주장(4/28, 연합뉴스)
 - 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몰수와 동결조치를 단행한 북한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금강산지구 내 민간부동산 동결조치에 입회하기 위해 27일 방북했다 28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온 조국래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김 국장(김광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이 27일 오전 업체관계자들에게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민족화합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는데 남쪽 정부는 이것을 돈 몇 푼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을 즐기는 것도 비판하더라'며 불평했다"라고 전함.
 - 또한 "동결타지를 붙인 것은 북쪽이 아닌 남쪽의 잘못 때문이다. 피해자는 북쪽이고 가해자는 남쪽이다. 여러분도 피해보상 요구는 남쪽정부에 하라. 우리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덧붙임.

- 북한산 청바지, 올 가을 남한서 선보여(5/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청바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스웨덴 의류업체 '노코진스(Noko Jeans)'가 올 가을 북한산 청바지를 남한에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함.
 - '노코진스' 관계자를 인용, "북한산 청바지가 꾸준히 스웨덴에서 판매되고 있어 청바지를 더 생산하고, 스웨덴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 작년 12월 북한에서 만든 청바지 1천100벌을 스웨덴에 반입해 고급 백화점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정치 쟁점화를 꺼린 백화점 측의 퇴출 조치로 상품을 철수했다가, 이후 수도 스톡홀름의 점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시작
 - 북한 내에서 청바지가 대량으로 생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02년 삼성물산이 청바지 1만 벌을 북한에서 임가공 생산해 '카운트다운'이란 브랜드로 남한서 판매했었음.

- 금강산 인원 철수...중국인 직원 귀환(5/2, 연합뉴스)
 -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시설관리를 해온 중국인(조선족) 근로자 36명이 이날 오후 3시 30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
 - 현대아산 등의 한국인 직원 24명은 3일 오전 9시 40분께 귀환할 계획
 - 북한은 지난달 30일 금강산지구의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를 마친 뒤 "금강산관광지구에 16명만 남기고 나머지 관광관련 인원은 5월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



-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민간교역 축소,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 중이며, 금강산 인원의 철수가 완료된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클린턴-다이빙귀, ‘北 6자복귀 문제’ 논의(4/3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귀 중국 국무위원이 29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이날 아침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장시간의 통화를 했다면서 클린턴 장관이 다음달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또 클린턴 장관과 다이빙귀 위원간의 대화에서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와 관련된 협상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루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이란, 북한에 대한 정책간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경우 북한이 먼저 해야 할 근본적인 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만일 당신들(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양자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있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서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강조, 비핵화 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 “북한 같은 NPT 임의탈퇴국 제재방안 논의”(4/29)

- 내달 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처럼 NPT 회원국 혜택을 받다가 임의 탈퇴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자안타 다나팔라 전 유엔 사무차장을 인용해 보도했음.
-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 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던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북한처럼 NPT 회원국으로서 핵 관련 지식을 손쉽게 취득한 뒤 임의로 조약에서 탈퇴해 핵실험에 나서는 나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데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이어 “NPT에는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번 평가회의에서 임의탈퇴 방지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NPT 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국제사회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실사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 다음달 탈퇴를 선언했다가 그 해 6월 2차 미·북회담에서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음.
- 그러나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북한은 이듬해 1월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공식 선언했으며,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작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음.

● 외교부 “6자회담 진전, 천안함파 연계해 검토”(4/29)

-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29일 천안함 사건이 6자회담 재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천안함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과 관련지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태가 중대한 국면에 있으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과제”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북한 측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의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영향받을 것”이라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6자회담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음.
- 김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우리의 자체적인 방안과 양자적인 차원, 유엔을 포함한 다자적 차원의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엄중한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우리가 취할 대응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안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 “대응 조치를 위해 나가는 데 있어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주요 관련국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필요한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핵 6자회담 다시 '동면'할까>(4/28)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면서 회담재개를 향한 추동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흐름임. 당장 관련국들 사이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공개 거론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 정부 고위소식통은 28일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은 이제 연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6자회담을 재개하지는 소리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 같은 기류의 중심에는 사건의 직접 피해당사자인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도 같이 놓여있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임. 특히 미국은 지난 2일 커트 캠벨 차관보의 방한 계기에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방침을 우리 측에 공식 전달했다는 후문임. 한 소식통은 “한·미가 이십전십으로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던 와중에 (캠벨 차관보가) 백악관과 국무부가 협의한 결과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중국도 미국의 이 같은 전략적 스탠스에 ‘이해’를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옴. 한 고위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도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정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천안함 사건 조사와 추후 대응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사실상 유보될 것이라는 다소 이른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앞으로 1~2개월의 조사·분석작업을 완료, 공식보고서를 작성한 뒤 상임·비상임이사국들에게 이를 회람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정부 고위소식통은 “6자회담이 앞으로 몇 개월간 열리지 않아도 큰 방향에서 지장이 없다”며 “앞으로 회담이 재개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6자회담 재개흐름이 천안함 사건으로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한 편임. 당장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 속에서 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달리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재개흐름이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이는 역내 질서의 양대 축인 미·중이 외견상의 신중론 속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향한 발신음을 계속 보내고 있는 데서도 읽히고 있음.
- 장신썬(張喜森)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록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중단요인이 생겼지만 6자회담 관련국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 나토 외무장관 회의 직후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6자회담에도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캠벨 차관보는 26일 홍콩에서 열린 ‘2010



홍콩 국제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해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전된 신호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음. 미국 정부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강경스텐스로 돌아서고 있지만 그 기저에서는 대화의 끈을 계속 살리려는 기류가 온존하고 있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의 파장이 잦아드는 일정시점에서는 ‘천안함 프로세스’와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별도로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미·중이 특정시점에서 전략적 이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 경우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못한 우리 정부로서는 유연한 스텐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임.
- 한 고위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어프로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국면과 상황에 따라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음.

● 美 “北 도발적 행동, 6자회담 재개에 영향”(4/26)

- 미국 국무부는 28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고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의 예단을 피하면서도, 침몰 사고에 북한이 개입돼 있을 경우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문제들을 반드시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침몰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원하며, 이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분명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 때문에 향후 상황을 예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조사를 지켜보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사고 원인이 외부 폭발 때문이라면 도발적 행동에 따른 것임을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제, “원인이 외부 폭발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실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이 인양됐기 때문에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그런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미기



- 업연구소(AEI)에서 행한 강연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 문제를 다루고, 진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과 의구심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음. 킹 특사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고의 배후로 북한을 특정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 주일 내에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음.
-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느냐가 향후 미·북 관계의 설정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공존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삼 촉구했음.

나. 미·북 관계

● “천안함 北소행 밝혀져도 대응방안 난제” <WP>(4/29)

- 천안함 침몰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어려움이 많고, 이런 문제까지도 북한이 계산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 신문이 29일 분석했음.
- WP는 이날 사실을 통해 “불량국가가 수십 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행위를 저지르고 책임을 부인하며 보복을 피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신중한 조사로부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음.
- 초기부터 북한 공격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한국 국방장관은 이번 주에야 “어뢰가 천안함 폭발의 원인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그것도 누구로부터의 어뢰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WP는 한국의 신중한 대응을 소개했음.
- WP는 하지만 그러한 조심스러운 언급조차도 국제적인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곧바로 ‘격하’됐으며,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가 “(한국 국방장관 언급은) 조건부 발언이었다”며 논평한 점을 상기시켰음. WP는 어뢰 파편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음. WP는 “하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진짜 문제는 이 대통령이나 오바마 행정부 모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묘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군사적 보복은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은 동의가 필수적인 중국의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WP는 분석했음.
- 또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이미 대외무역의 70%를 의존하는 중국에 더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음.
- WP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 왔다”며 “자극적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국내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합의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음.

- 대북 제재의 효과과 관련, WP는 “더 엄격한 제재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체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음.
- 하지만 WP는 “북한은 여전히 중국이 받쳐주는 한 생존해 갈 것 같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음. WP는 “바꿔 말하면,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인을 저지르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라며 “김정일은 이런 것까지도 모두 계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유대인 출신 美의원들 북한 문제 관심 많다”(4/29)

- 미국 의회에서 북한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대인 출신 의원들이 북한 문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적극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28일 분석됐음. 윌밍턴 노스캐롤라이나대(UNCW)의 서정근 교수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 현황을 분석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음.
- 서 교수는 유대인 출신 의원은 다른 의원들보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법안과 결의안 공동발의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음.
- 앞서 그는 유대인 의원들의 경우 핵확산이나 인권증진 등 외교정책 문제에 자주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의 핵프로그램 협력 등에 대한 잦은 보도로 유대인 출신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우려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었음. 서 교수는 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곳의 정치인들이 북한 문제 관련 입법에 적극적이었으며, 소위별로는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음. 법안 공동발의 참여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 간의 큰 구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

다. 중·북 관계

● “랴오닝 성장 단둥역 진입..1급 경비”(5/2)

- 중국 랴오닝(遼寧) 성장을 비롯한 성 지도부가 2일 오후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의 역사에 진입하고 단둥시가 1급 경비체제를 가동한 정황이 포착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단둥의 한 소식통은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 성장과 부성장급을 포함한 성 지도부 5~6명이 이날 오후 3시께 단둥에 도착, 지도부 전용 호텔인 단둥빈관을 거쳐 단둥 역사에 오후 5시께 진입했다”고 말했음.



- 통상 김정일 위원장이 단둥을 통해 중국 방문을 시작할 때 랴오닝성 지도부가 단둥에서 직접 그를 영접해온 관례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방중이 수 시간 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림. 이날 중국 공안당국이 단둥에 1급 경비체제를 가동한 정황도 포착됐음.
- 단둥의 다른 소식통은 “단둥 공안국이 1급 경비체제를 가동, 단둥역 등 주요 시설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으며 압록강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투숙객을 철수시키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실제 이날 오후 5시부터 단둥 역 광장에 경찰 차량 5대와 경찰관 20여 명이 배치돼 차량 출입을 막는 등 경계가 대폭 강화됐음.
- 단둥 역 광장은 평소 100~200대의 택시가 열차 승객들을 상대로 호객을 하는 등 북적거렸음. 압록강 철교인 북중 우의교 주변에도 이날 오후부터 경찰과 군인들이 배치됐음.
- 단둥 역사와 붙어 있어 역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단테(丹鐵)호텔은 이날 출입이 봉쇄돼 직원들조차 출입을 못하고 있음. 북중 우의교가 가장 잘 보이는 중련호텔도 1일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돼 투숙객들을 내보내고 있음. 또 투숙객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받아둔 예약도 취소하고 있음. 이 호텔 1층 카운터와 커피숍에서는 20여 명의 경찰이 서성이는 장면이 목격됐음. 중련호텔 관계자는 “자세한 이유는 얘기해 줄 수 없다”면서 “3일 이후에도 예약이 가능할지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음.
- 이 호텔은 과거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 1~2일 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예약을 받지 않았음. 최근 보수공사를 거쳐 새로 영업을 시작한 인근의 귀면(國門)호텔 역시 1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했음. 이 호텔 카운터에는 종업원 1명만 자리를 지킨 채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찾은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절 황금연휴 기간 단둥의 호텔을 찾았던 중국 관광객들이 항의하기도 했음. 단둥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난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나돌고 있음.
- 앞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제기됐던 지난달 말과 이달 초를 전후해 노동당 국제부를 비롯, 선발대 역할을 하는 북측 실무자들이 베이징 등지를 다녀간 바 있어 김 위원장의 방중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시기 결정만 남겨 놓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음.
- 베이징의 소식통들도 단둥의 징후 등을 볼 때 김 위원장이 금명간 방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후진타오 “中·北, 국제무대에서 서로 지지·협력”(5/1)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30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북·중) 쌍방 사이의 친선 내왕과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전했다. 후 주석은 이날 김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중·조(북) 친선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참가한 것은 조선 당과 정부가 중조친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이 되는 올해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 후 주석과 김 상임위원장의 면담에는 북측에서 오수용 내각 부총리와 김성기 외무성 부상, 최병관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중국측에서는 위정성(俞正聲) 상하이시 당서기,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당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천스궈(陳世炬) 주석판공실 주임, 우하이룽(吳海龍)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 배석했다.
- 엑스포 사상 처음으로 공식 참가를 결정한 북한은 한국관과 100m가량 떨어진 곳의 1천㎡ 부지 위에 중국이 건설해 제공한 임대관에서 ‘평양의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로 북한관을 조성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 中, 라진항 진출 기간교통망 10월 개통(4/29)

-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시아 물류 기지로 육성하려는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의 축이 될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훈춘(琿春) 고속도로가 오는 10월 개통됨. 이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투먼-훈춘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경절인 10월 1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연변일보가 29일 보도했다.
- 2008년 창춘-지린-투먼 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투먼-훈춘 구간까지 완공되면 중국 동북지방의 교통 중심인 창춘에서 대북 관문인 투먼과 훈춘에 이르는 창지투 선도구의 기간 교통망이 완성돼 창춘-훈춘 간 소요시간이 현재의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됨.
- 훈춘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으로 진출하는 출구이며 투먼은 라진항에 이어 중국이 동해 진출의 새로운 루트로 추진 중인 청진항을 잇는 대북 창구임.
- 북한과 중국은 훈춘-라진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 중임. 이럴 경우 창춘에서 라진항까지 6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됨.
- 따라서 창-지-투-훈 고속도로의 완공은 중국이 추진하는 ‘지에깡추하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함)’가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함.
- 기간 교통망의 완공에 따라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2020억 위안



(458조 원)을 들여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려는 창지투 선도구 사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중국 교통부와 지린성은 이 고속도로 건설에 이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린-투먼-훈춘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에도 착수했음. 지린성 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 사업으로 불리는 이 고속철도까지 완공되면 동북 3성과 내이명구(內蒙古)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은 물론 북한 항구를 통한 중국의 해양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中, 北 변경관광 5년 만에 전면 재개(4/28)

- 중국인들의 북한 변경관광이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는 28일 중국 공안부와 감찰부, 국가 여유국이 최근 연변주의 북한관광 통행증 발급을 시범적으로 재개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 연변주 관계자는 “시범적이라는 꼬리가 붙었지만 북한 변경관광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와 관련 연변주 여유국과 공안국은 27일 회의를 열어 북한 변경관광의 안전을 위해 변경관광을 취급하는 관내 30여 개 여행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변경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음.
- 중국 당국은 북한 관광에 나서는 자국민 사이에 도박 열풍이 불자 2005년 연변지역의 북한관광 통행증 발급을 금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북한 단체관광을 전면 중단했음.
- 이후 지난해 4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시작으로 투먼(圖們), 안투(安圖)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북한 변경관광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며 지난 12일부터 북한 단체관광도 전면 허용했음. 북한 조선관광사가 지난 13일부터 선양(瀋陽) 총영사관에서만 발급하던 북한 관광 비자를 옌지(延吉) 대표처에서도 취급하기로 한데 이어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연변에서의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임.

● “北김영남,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4/26)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0 상하이(上海)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30일께 상하이에 도착해 이명박 대통령 등 각국 정상에 참석하는 공식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김 상임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개막식 환영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상하이를 방문해 개막식과 환영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장과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얼굴을 맞댈 가능성이 커 보임. 이 대통령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환영 오찬에 참석, 북한의 2인자이면서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김 상임위원장과 악



수를 하는 등 ‘짧은 조우’를 한 바 있음.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대외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인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아프리카 3개국도 순방했음. 이번에 엑스포 사상 처음으로 공식 참가를 결정한 북한은 한국관과 100m가량 떨어진 1천㎡ 부지 위에 ‘평양의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로 북한관을 조성해 관람객들을 맞고 있음.
- 한편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본 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인해 부각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달 말 방중설에 대해 각종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한 외교소식통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데다 이 사건이 6자회담과 이를 위한 북-미간 양자 접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3월 말 4월 초에 비해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판단되며 현재 특별한 징후가 감지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음.

● 北, 연지도 관광 비자 발급 개시(4/26)

- 북한이 중국 연지(延吉)에서 관광 비자 발급 업무를 개시, 연변(延邊)에서도 자유롭게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길림신문이 26일 보도했음.
- 신문은 북한 조선관광사 연지대표처가 지난 13일부터 연지에서 비자를 발급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룡징(龍井)시 싰허(三合)통상구를 출발, 북한 청진에 도착한 뒤 전세기로 평양으로 가는 북한 관광 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북한 변경 일대를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변경 관광은 룡징 등 중국 변경도시에서 발급하는 변경관광 통행증만으로도 가능했지만 평양 등 북한 내륙을 관광을 하려면 반드시 선양(瀋陽)북한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을 밟아야 했음. 이 때문에 북한 관광에 나서는 중국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선양에서 고려항공을 타거나 단둥(丹東)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가는 열차를 이용해왔음.
- 신문은 또 룡징시가 그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던 북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연변주의 8개 시와 현 거주자는 물론 외지인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로 싰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 칠보산 등을 관광하는 변경 관광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했음.
-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당시 북·중 양측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2006년 금지한 자국민의 북한 단체 관광을 지난 12일부터 전면 허용했음. 이에 따라 지난 24일 400여 명을 태운 관광열차가 처음으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연변주가 훈춘-러시아-러시아 극동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북한 관광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등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음.



● 中외교가 “김정일 조기방중 가능성 희박”(4/26)

- 일본 언론들이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기 방중 가능성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이 엑스포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중국 외교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음.
- 청와대는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를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엑스포 개막 환영 만찬과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태와 금강산 부동산 동결 조치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적어도 4월 말 김 위원장의 방중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또 다른 소식통은 “상하이 엑스포 개막에 맞춰 이 대통령뿐 아니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대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이들을 면담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의 5월 초 방중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음.
-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둥(丹東)과 선양(瀋陽)의 치안과 보안을 책임진 왕민(王珉) 랴오닝(遼寧)성 서기가 부재 중이라는 점도 김 위원장의 조기 방중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있음. 그는 외자 유치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 유치단을 이끌고 지난 19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임. 2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특강에 나선 뒤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임.
- ‘혈맹’인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김 위원장 방중의 ‘신변 안전’ 최일선 책임자인 왕 서기가 방중 직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행보는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이 당장은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외교가는 받아들이고 있음.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 랴오닝성 성장이 랴오닝성 서기를 대신해 그를 영접한 적도 있긴 했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 루트인 랴오닝성의 치안과 보안 최고책임자인 왕 서기가 김 위원장의 방중을 목전에 두고 해외 방문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
- 한 대북 소식통은 “2004년 용천 역 폭발 사고를 경험한 이후 북한 내에서조차 사전에 동선이 노출되면 계획했던 일정도 취소할 만큼 김 위원장이 보안에 극히 민감하고 그의 방중에 맞춰 중국 내에서 철저한 경계와 통제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왕 서기의 이번 해외 출장은 김 위원장의 조기 방중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18일 아사히 신문은 시작으로 도쿄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교도



통신 등 일본의 유력 매체들은 잇따라 김성남 국제부부장을 비롯한 8명의 조선노동당 간부가 지난 2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방중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김 위원장의 방중 관련 움직임이나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日 공안위원장 “조선학교, 방과 후 세뇌”(4/26)

- 일본의 공안위원장이 조선학교(조총련계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등을 세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 나카이 히로시(中井裕)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25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가족 집회에 참석, “조선학교에서는 방과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세뇌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그러나 조선학교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세뇌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음.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이어 조선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조총련 자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납치를 자행한 국가에 자금을 지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학교에 대한 학비무상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이날 집회에서는 일본과 북한과의 왕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강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음.

마. 기타

● WHO 사무총장 “北 보건의료 개선 인상적”(5/1)

-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으로서 9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30일 “북한의 의료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음.
-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을 마치고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복귀한 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WHO와 한국정부가 함께 북한 의료 인력 및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신뢰 구축에도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 찬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고, 병원 내 감염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공중보건상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며 “WHO가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과 말라리아 예방 사업 역시 개선됐다”고 평가했음. 찬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플루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좋은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고 평가하고,



“전체인구 2천400만 명 가운데 10% 정도인 200여만 명 분의 백신이 북한에 공급됐다”고 밝혔음.

- 찬 사무총장은 또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2008년과 2009년에 북한 내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찬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평양의 김만유병원에서 이 병원과 각 도 인민병원을 연결하는 원격진료서비스 운영을 개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찬 사무총장은 그러나 “의료 관련 기간시설과 장비의 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약품과 의료용품 등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 정부 역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영양실조 등의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영양 개선과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에 좀더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찬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이후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창식 보건상, 박의춘 외무상 등과 면담했고, 북한의 대표적 산부인과병원인 ‘평양산원’과 주체사상탑, 황해북도 중화군 룡산리 인민병원 등을 방문했음.
- 북한 언론은 2001년 11월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사무총장 이후 9년 만에 WHO 수장 자격으로 방북한 찬 사무총장의 동정을 상세하게 보도했고, 찬 사무총장은 일정을 하루 연장해 29일 북한을 떠났음.

● 방북 스위스 연방의원 “北 경제, 한계상황”(4/30)

-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한 스위스 연방의회 울리히 쉘리에 의원은 “(거리에서 본)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북한 경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했음.
- 우파 스위스국민당(SVP) 중진의원인 쉘리에 의원은 다른 연방의원 4명과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근무자 등이 포함된 방북단과 함께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개성, 판문점 등을 둘러봤고, 이후 서울을 방문해 17일 귀국했음.
- 부인과 함께 방북한 쉘리에 의원은 최근 스위스 현지 독일어 일간지 블리크(Blick)와의 인터뷰에서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매우 우울한 분위기를 느꼈다면서 “20층짜리 고층건물에 4층까지만 물이 공급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열악한 에너지 사정을 전했다.
- 올해 65세인 쉘리에 의원은 방북단이 항상 통제 하에 있었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는 전혀 갖지 못했다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묘사했음.
- 그는 “심지어 저녁 산책조차도 감시 하에서만 가능했다”며 “우리가 호텔 출입문에서 열 걸음만 걸어가도 틀림없이 누군가 매우 친절하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와 우리와 동행했다”고 말했음. 그는 “한 번은



관광안내원을 설득해 텅 빈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갑자기 두 명의 ‘손님’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회상했음.

- 그는 방북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망한 그의 부친 김일성 주석에게 외국 정상과 외교사절들이 증정한 30만 개 이상의 선물들을 전시한 장소에 갔던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전시물들은 마치 북한이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음.

● 北 10년째 종교탄압국 지정될 듯(4/30)

-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9일 발표한 ‘2010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라크 등 13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음.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째 종교자유탄압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음.
-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중 하나로,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어 “북한은 개탄스러운 인권과 종교자유 기록을 계속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종교자유 억압 사례를 열거했음.
- 보고서는 특히 최근에는 북한 공안당국이 중국의 기독교 교회에 침투하고 있으며, 북한인 신도들을 붙잡기 위해 가짜 기도 모임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음.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최대 4만 명이 종교적 이유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음.
-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6자회담에서 종교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나가는 한편 이들 분야의 진전을 추후 북한에 대한 경제, 정치, 외교적 지원과 연계시킬 것을 촉구했음.
- 또 북한의 민주화 촉진과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비슷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노력도 권고했음.
- 이 밖에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R)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 망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 망명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중국이 지지하도록 미국 정부가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은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가을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음.
- 이날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된 국가에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도 포함됐음.



● 안보리회부前 중·러에 ‘천안함보고서’ 전달(4/28)

-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에 정식 보고서를 전달하고 안보리 회부 문제를 사전 설명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 특히 북한의 소행임을 100% 입증하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어뢰 공격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증거자료가 수집될 경우 중·러에 이를 설명하고 안보리 회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주목됨. 정부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안보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증거가 나오면 관련국들 사이에 안보리 회부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미 군함의 파손된 선체 자체도 물증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조그만 파편이 나오더라도 합금의 성분 비율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당장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미국은 선체의 파손상황 등을 담은 3D 동영상을 노퍽과 애나폴리스 등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해군 전문분석시설로 보내 정밀 분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 조사결과는 1~2달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정식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에게도 정식 보고서를 보내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군사적 응징 옵션과 관련, “우리도 충분히 군사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옵션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소식통은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지난 2일 미 커트 캠벨 차관보가 한국에 왔을 때 백악관과 국무부의 협의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북·미 추가접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 정부도 이심전심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미국이 그런 뜻을 전달해 와서 결국 공감대를 이루게 됐다”며 “특히 미국은 같은 입장을 중국에도 설명했으며 중국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문제는 천안함 사건과 연계돼서 다뤄질 것이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6자회담이 열리기 어렵다”며 “앞으로 회담이 재개되려면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앙코르와트에 전자박물관 건립 추진(4/26)

- 북한이 캄보디아의 유서 깊은 앙코르 와트 사원 인근에 전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26일 밝혔음.
- 켄 사릿 캄보디아 문화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만수대 해외사업부가 앙코르 와트 사원 인근에 사원 역사를 보여주는 전자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사릿 장관은 자신이 지난주 만수대 해외사업부 관계자 및 리인석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사안을 논의한 뒤 박물관 건립 방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음.
- 그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앙코르 와트 관광객들이 사원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박물관 건설 이전에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박물관 건립 방안을 더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월 만수대 해외사업부 관계자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세기 건축물인 앙코르 와트 사원은 캄보디아의 주요 관광명소로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립에 있음. 앞서 북한은 아프리카 세네갈에도 49m 높이의 조형물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지은 바 있는데 조형물 제작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토지매각 등이 논란을 야기했음.

● WHO 사무총장, 북한 도착(4/26)

-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26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찬 사무총장이 28일까지 예정된 이번 방문 기간 북한의 병원과 의료 시설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 찬 사무총장의 방북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음. 서울 소재 대북 단체인 ‘좋은벗들’은 지난 겨울 북한에서 2천 명 가량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음. WHO 사무총장의 방북은 2001년 그로 할렘 브루틀란트 당시 사무총장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전작권전환 심포지엄 발표문 요약>(4/29)

-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과 한국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한국국방안보포럼은 29일 전쟁기념관에서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음.
-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표문을 요약한 것임.
- ▲국방대 홍성표 교수 = 2012년은 한미 양국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임. 국내정치 문제로 어수선한 시기에 전작권 전환과 같은 중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음. 주한 미군 평택기지이전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바,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판단해야 함. 원래 계획에 2012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군작전에 관한 한 주한미공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됐음. 공군전작권 전환시기 판단 연구결과 2019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음.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9년은 한국군이 전략정보능력을 포함한 대북전쟁억지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이며, 그 기간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돼 작전대비태세가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점임. 한미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합의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이제 와서 어느 한 쪽이 연기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지만 안보여건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공론화해야 함. 양국 정부와 국방당국의 사려깊은 판단이 요구됨.

-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 =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올 역량이 있는 의문을 갖게 함. 한반도 안보상황의 객관적 평가가 전작권 전환의 전제가 되므로 한미 양국은 현 안보상황을 재검토해야 함. 한미는 안보상황평가를 공동으로 해왔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검토에서 누락됐음.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전환시점을 재설정해야 함. 하지만 전환 합의는 양국 간 공식 합의이기 때문에 당장 번복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양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함. 민간전문가나 싱크탱크 등 전문가그룹이 목소리를 내야 함. 여론주도층이 움직이면 정치권이 움직이고 이는 결국 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그룹에까지 연결됨. 한국정부에 대해선 대북억지력 강화 이후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토록 권고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전력증강에 주력해야 함.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군 당국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전력증강을 위한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 기존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했음.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국의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음. 안보위협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북한의 대남전략변화로 인해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인 한국군의 역량,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이 모두 충족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한국 측의 연기요청에 미국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딜레마가 상존함. 따라서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 선언, 한·미·중의 권력교체시기, 김정일 70세 등 2012년이라는 해가 가지는 시기적인 중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정보융합능력과 합동성에 기반한 한국군 역량 검토에 미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바람직함.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면 전작권 이양으로 도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농후함. 이양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썩기를 막을 결의와 조치가 필요한데 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대북경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 =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 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됨.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음. 연합사 해체는 또 미 증원 전력파병에 대한 미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함. 미국이 연합사가 해체되어 한국방어 책임에서 해제된 뒤 북한이 최악의 경우 서울에 핵을 사용해 국가지도부를 무력화하고 수도권을 점령했을 때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자문해야 함.
- ▲국방대 김영호 교수 = 전작권 전환이 동북아 안보에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지만 전작권 전환으로 야기되는 한국군, 주한미군,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따라 동북아 안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대북방위와 역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 과거보다는 더욱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급변사태, 또 주변국과의 우발적 분쟁시 위기관리기능을 한국정부와 군이 전면에 나서 도맡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 강대국과의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위기해소 및 관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음.
- 전작권 전환과 주둔태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주한·주일 미군 간 협력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고,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을 가능케 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역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한미군의 역내분쟁에의 개입가능성을 높여 한국의 원치않는 분쟁에의 연루나 주변국들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초래할 수 있음.

● “전작권 전환 2019년으로 연기해야”(4/29)

-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홍성표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한국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전작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원래 2012년 전환 이후에도 공군작전에 관한한 주한미공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면서 “공군전작권 전환 한국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해본 결과 2019년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며 2019년을 전체 전작권 전환 시기로 제시했음.
- 홍 교수는 “2019년은 한국군이 전략정보능력을 포함한 대북 전쟁억지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이며, 그 기간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되어 작전대비태세가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은 한미 양국 모두 대통령 선거



가 있는 해로, 국내정치 문제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며 “2012년이란 시점은 정책 추진상 일종의 목표시점으로 설정한 것이지 시기가 절대적인 고려사항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음.

-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전작권 이양의 핵심은 한국군이 2012년에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의 문제”라며 “천안함 사태는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올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음. 이 박사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객관적 평가가 전작권 전환의 전제이므로, 한미 양국은 안보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북한 정권이 생명줄과 같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음.
-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전환시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단단계로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단계적으로 환수하면서 전환 준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전작권 단독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전환돼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시에는 미군이 지휘권을 갖는 유엔사 체제로 가는 등 유엔사 위상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되며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을지 국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기초연설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며, 북한의 전략적 계략에 항복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북한의 전략적 이익은 극대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내달 초 한·미 통상 현안 점검(4/28)

-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올해 첫 회의가 내달 4~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음.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위생·검역(SPS) 및 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요청할 계획임. 미국 측은 정보통신 및 전자기기, 의약품, 농업,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관심사항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음. 우리 측은 안충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 측은 브라이언 트릭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함.

● 클린턴 “천안함, 한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4/28)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 “동맹국인 한국 및 다른 역내 파트너(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하지만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전날 홍콩에서 이번 사건에 북한의 책임이 있음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캠벨 차관보가 한 말에 덧붙일 것이 정말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 “美, 천안함 관련 한국조치 지지해야”(4/28)

-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취하게 될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긴장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의 결에 서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을) 공격하길 주저할 경우, 미국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 사람인 것처럼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고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더욱 강력한 국제제재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과 한국의 접근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징벌적 조치를 미국 독자적으로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북한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언급을 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의 지적은 클린턴 장관이 지난 23일 “(한반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을 유발하는 행위나 오판이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내용이 남·북한 모두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임.
- 클링너 연구원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지난 1996년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 한국의 시민 10명이 사망했을 때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국무장관이 남·북한 양쪽에 자제를 요청했던 기억을 한국인들 사이에서 되살리고 있다”고 밝혀 지금은 한국을 지지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삼 강조했음. 그는 “천안함 위기는 미국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매우 굳건한 시기에 발생했다”면서 “한·미 동맹의 힘은 미·일 관계가 뼈격대고 있는 것과 확실하게 대비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의 일치된 대응은 미국에 있어 동맹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미군도 천안함 침몰 北어뢰 소행 추정”<CNN>(4/26)

-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미군도 북한의 어뢰공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음. CNN방송은 26일 서울발 인터넷판 기사에서 미군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천안함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보도했음.
- 이 당국자는 미국은 천안함이 수중 폭발에 의해 침몰했으며, 폭발장치는 천안함 선체에 닿지는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CNN은 이는 한국군 당국자들이 밝힌 결론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은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때문으로 보인다는 미군 당국자의 언급이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처음임.
- 앞서 민·군 합동조사단은 전날 천안함이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 수중에서 어뢰나 기뢰 등으로 추정되는 수중무기에 의한 ‘비접촉 폭발’로 침몰했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

나. 한·중 관계

● MB “조사결과 나오면 中에 사전통보”(4/3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했음. 후 주석은 이날 오후 4시15분부터 30분간 상하이 영빈관인 서교빈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자리를 빌어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음.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국 지도부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5천만 한국 국민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 측 위로의 뜻을 한국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국 측에 사전에 알리겠다”고 중국 정부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아주 신중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천안함 자체의 내부 폭발이 아닌 비접촉 외부폭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민군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소개했음. 후 주석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음.



- 이처럼 천안함 침몰 원인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우방’으로 여기는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가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정부의 조사에 대해 신뢰를 표시한 것은 향후 대북 제재국면이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두 정상 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천안함 관련 공식협의를 첫 단추다. 5월 중순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5월 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향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후 주석이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깊은 관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이란 표현 쓴 것은 한국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와 함께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착실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FTA 절차를 좀 촉진하자”고 말했고, 후 주석은 “미래를 감안해 FTA를 가속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FTA는 입구에 들어서기는 쉽지만 출구를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6번째임.
-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후 주석이 주최하는 상하이 엑스포 환영만찬에 참석했으나 조우하지는 못했음.

● <후진타오, 남북 정상급 연쇄 회동>(4/3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천안함 사건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남. 3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후 주석은 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상하이에 도착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이미 만났으며 이날 오후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함.
- 중국은 북한의 경제, 외교적인 지원자이고 한국과도 주요 무역, 외교 파트너여서 이번 연쇄회동으로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짐. AP통신은 중국이 남북한의 직접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남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AP는 또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날지에 관심을 보이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한편, 이 대통령과 ‘북한 2인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엑스포 개막식과 후 주석 주최 환영만찬에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우가 예상됨. 그러나 최근 남북한은 천안함 사태와 금강산 부동산 몰수 등으로 민감해 대화를 나눌 상황은 아닌 것으로 관측됨.



- 한편 한국은 상하이엑스포에 국가관과 기업연합관, 서울시 도시관 등 3개 방면에서 엑스포 사상 최대 규모로 참석하며 북한은 한국 국가관에서 100m가량 떨어진 1천㎡ 부지에서 ‘평양의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로 북한관을 운영함.

● **李대통령 “中 성공진출이 경제 중요과제”(4/30)**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한국 경제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上海)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가진 국내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보면 통상이나 투자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진출하고 통상하고 투자하는데 있어 양국관계에서 어려운 것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정부 간 역할이 크기 때문에 외교관이나 대사나 총영사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 원론적 언급이나 이 대통령이 최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경제인은 중국·아세안 FTA 발표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 시장이 지금 또 변화가 있다”면서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에 대해 많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기업전략을 주문했다.
-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두말 할 것 없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우리 관계가 통상, 투자 측면에서 미국, 일본을 합쳐도 이미 능가를 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상하이 엑스포에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최초로 기업연합관을 건립한 것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오찬 참석자들은 칭하이(靑海) 대지진 피해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 이날 오찬에는 사공일 무역협회장, 조환익 코트라 사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박찬법 금호아시아나 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중 수교 이후 교역규모 22배로 증가(4/30)**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관심을 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1992년 수교 이후 2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



청에 따르면 한·중 간 교역 규모는 외교 관계를 맺은 1992년 63억7천 911만 달러에서 지난해 1천409억4천930만 달러로 22배로 증가했음. 수출은 이 기간 26억5천417만 달러에서 867억325만 달러로 33배로 늘었고 수입은 37억2천494만 달러에서 542억4천606만 달러로 약 15배가 됐음.

- 무역수지는 10억7천78만 달러 적자를 보이던 것에서 지난해(324억5천 719만 달러)에는 3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여 큰 변화를 보였음. 양국의 교역 규모는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특히 2000년 초반 가속도가 붙었음.
- 수교 첫해인 1992년 약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년 만인 1994년 100억 달러가 넘었고 1997년 200억 달러, 2000년 300억 달러, 2002년 400억 달러, 2003년 500억 달러, 2005년 1천억 달러를 각각 돌파한 데 이어 2008년 1천683억 달러였음.
- 그러나 한·중 교역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를 피해가지는 못했음. 1997년 236억8천932만 달러에 달했던 양국 교역규모는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듬해 184억2천795만 달러로 22.2% 줄었음.
- 또 2008년 최고점을 찍었던 중국과의 교역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난해 16.3%가 줄어 1천409억4천930만 달러에 머물렀음. 하지만 이 기간에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음.
- 흑자 규모는 2008년에는 144억5천863만 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24억5천719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대(對) 중국 수출은 5.1% 줄었지만 수입은 29.5%나 감소했음. 중국과의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22배로 증가하는 동안 일본과의 교역 규모는 2.3배로 증가했고 미국도 1.8배로 늘어나는데 그쳐 대조를 이뤘음.
- 미국과의 교역 규모는 1992년 363억9천328만 달러에서 지난해 666억 8천931만 달러로 증가했고 일본은 310억5천839억 달러에서 711억 9천835만 달러로 늘었음.
- 교역 규모는 1992년에는 미국(364억 달러), 일본(311억 달러), 중국(64억 달러) 순이었지만 완전히 역전돼 지난해에는 중국(1천409억 달러), 일본(712억 달러), 미국(667억 달러) 순이었음.

● 장신편, 유외교 예방.. '천안함' 협의(4/28)

- 장신편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음. 장 대사의 이날 예방은 지난 26일 신임장 제정에 따른 정식 취임인사 차원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 외교부 내에서 가장 명망 높고 외교 경험이 많은 장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두 사람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오는 30일 중국 상하이(上海)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비롯한 양자 현안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 특히 역내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그러나 장 대사는 유장관을 만난 뒤 2층 현관에서 만난 연합뉴스 기자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공항에 가야 한다”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외교부 청사를 떠났음. 장 대사는 상하이(上海)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 영접 준비를 위해 이날 중국으로 출국함.
- 지난달 31일 부임한 장 대사는 지난 22일 낮 주한 중국문화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안함 사건에 언급, “중국 정부는 관련 각 측이 큰 차원에서 출발해 이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양측은 형제로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음.

● 中 “천안함 사건 적절히 해결될 것”(4/27)

- 중국 외교부는 27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적절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이(上海) 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환영하며 이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소개했지만 한·중 정상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이 의제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가한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참석하는 것은 맞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최종 명단이 입수되면 29일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대변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해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사실상 부인했음.

다. 한·일 관계

● 근로정신대 할머니 “日 사죄하라” 공개서한(4/29)

-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79) 할머니가 29일 일본의 책임있는 보상과 사죄를 촉구하는 편지를 띄웠음.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미쓰비시에 보



내는 편지를 공개했음.

- 그는 13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근로정신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눈물의 세월’을 털어냈음. 그는 “이제 남은 것은 허약한 몸통이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일본과 당신들의 회사 때문입니다. (중략) 죽기 전에 잘못했다는 사죄 한마디 받아보겠다는 것이 과한 욕심입니까”라며 “당신들의 양심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두 눈 부릅뜨고 싸울 것입니다”고 호소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주재 자국 외교관 폭행에 항의(5/1)

- 미국 경찰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마구 진입, 중국 외교관을 구타하고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체포한 사건이 발생, 중·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중국은 지난달 30일 휴스턴 주재 자국 부총영사와 가족들이 현지 경찰로부터 구타와 모욕을 당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와 관련기관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바이런(郁伯仁) 휴스턴주재 부총영사가 지난달 24일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경찰관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당한 사건에 대한 기지들의 논평을 요구받고 이 같이 답했음.
- 장위 대변인은 중국은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주휴스턴 총영사관이 모두 나서 미국 측에 항의하고 빈 영사협약과 중·미 영사 조약에 의거, 중국 외교관과 가족, 그리고 공관에 대한 불가침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이 중국 외교관을 상대로 중국 공관에서 발생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휴스턴시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휴스턴시는 시장 명의의 성명에서 ‘위바이런 부총영사 사건’이 중국 총영사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성명은 이어 문제의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지점이 중국 공관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구타와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뜻을 내비쳤음. 문제의 경찰관 3명은 이미 직무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의 발단은 위바이런 부총영사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도난당한 줄 모르고 가족들을 태우고 시내에서 총영사관으로 돌아간 데서 비롯됐음. 경찰관들은 이 승용차의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정지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질주하자 중국 총영사관 주차장까지 추적, 위 부총영사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음. 위 부총영사는 이 과정에서 손과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근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 中에 제3국 군사협력 제의”(4/28)

- 미국 국방장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중국통’ 학자인 마이클 필즈버리 박사가 미·중 양국이 제3국에서 군사 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음.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필즈버리 박사가 전날 방미한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의 옌쉐통(閻學通) 소장과 양국 학술 교류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보도했음.
- 미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필즈버리 박사는 “양국 군이 제3국에서 군사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상호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미국이 관심있는 안보문제인 분쟁국 등의 정부시책 시행착오 방지, 해적 소탕, 핵확산 반대 등을 위해 양국은 제3국에서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양국이 군사협력을 전개해 나가야할 대상 국가가 최소 10여개가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등을 꼽았음. 필즈버리 박사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로 중단된 양국 군사교류가 일단 회복되면 펜타곤은 중국과 안보협력 의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는 “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매년 개최하는 등 말로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통된 전략적 목표도 없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도 없다”고 꼬집었음.
- 옌쉐통 소장 역시 필즈버리 박사의 견해와 흐름을 같이 했음. 그는 각종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봉합 국면을 맞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해 “양국은 친구라기보다는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한 가짜 친구이기 때문에 전략과 안보문제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음.
- 그러나 1990년대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스탠폴튼 로이는 “양국 정부가 공개된 곳에서 전략과 안보 문제 논의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전략적 협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며 “미·중 양국은 이미 전략적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음.
- 신문은 옌 소장을 비롯한 중국 학자들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것은 학술교류의 목적이 크지만 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미국 정부 관리들과의 교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음.

● 中, 美 닭고기에 상계관세 부과(4/28)

-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산 닭고기 및 가공제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음. 상무부는 성명에서 조사결과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미국 정부로부터 가격 기준으로 최대 31.4%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국 내 경쟁업체들에게 해를 끼쳐 이런 조



치를 취한다고 밝혔음. 상무부는 중국의 조사에 응한 미국의 닭고기 수입업체는 30여개로 최저 3.8%에서 최대 11.2%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대부분 업체의 보조금 비율은 6.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미국 업체는 31.4%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고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중국은 미국의 닭고기 수출업체들이 자국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이번에 관세 조치가 내려진 품목은 흰털 가진 닭의 생고기와 닭 부산품 및 가공품 등을 포함함.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자국산 타이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추가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조치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미국산 닭고기에 43.1~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로 한 바 있음.

● “中 군함 출항, 美·日 감시받아”(4/27)

- 중국 군함이 대양으로 출항할 때 미국과 일본의 치밀한 감시를 받는 등 해양국가인 일본과 태평양까지 진출한 미국이 합동작전으로 중국 해군 함정의 바닷길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선구도보(國濟先驅導報)가 26일 보도했음.
-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이 신문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 인도양 등 대양으로 진출하는 길은 동해의 1곳과 동중국해 4곳, 남중국해 4곳 등 총 9개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길은 3~4개 항로에 불과하다면서 그마저도 미국과 일본의 레이더와 헬기, 감청시스템 등을 통해 동선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전했음.
- 예를 들어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를 통해 공해상으로 나아갈 때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군함과 헬기를 띄워 24시간 밀착 추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상적인 항해를 방해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沖繩) 인근의 미야코(宮古)섬과 후쿠에(福江)섬에 전자 감청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등 해저 음파탐지기와 전자감시시스템 대잠초계기 P-3C, 해양감시위성 등을 통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은 말라카 해협 남부의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일본과 합동작전을 통해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감시하고 있음. 이번 보도는 중국과 일본이 최근 영유권 논란을 빚은 동중국해 해역에서 중국 해군의 훈련을 놓고 서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 함정이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벌이자 잇따라 동향을 언론에 발표하고 중국에 항의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고 중국 역시 공해상에서의 정기적인 정기 훈련이라고 맞받았음.
- 익명을 요구한 해군 관계자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양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중국 해군의 생명선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



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1894년 청일 전쟁 당시 해전에서의 패배를 또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중국 군함이 평소에도 자주 대양으로 나가 항로 정보를 숙지하고 전시에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보호할 수 있는 대형 호위함대를 건설해 중국의 해상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음.

● 캠벨 “천안함사건, 中에 책임있는 역할 요청”(4/26)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캠벨 차관보는 미국 동서센터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에서 열린 “2010 홍콩 국제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한미 양국)는 여전히 사건을 조사 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음.
-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특히 캠벨 차관보는 ‘중국 측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중국 측에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이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중국 측은 인명 피해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나는 중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요청한 데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마. 미·러 관계

● 美, 러 정상 “2차 대전 당시 상호신뢰 되찾자”(4/2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자신들의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치에 대항해 함께 싸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호신뢰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두 대통령은 65년 전 나치 독일군을 서쪽과 동쪽에서 협공해 들어갔던 미군과 소련군이 엘베 강에서 만난 날을 기념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오늘날 특히 요구되는 것은 역사적인 엘베강의 악수를 감싸고 있던 상호 신뢰와 승리에 대한 결의의 공유”라고 말했다.

- 러시아 측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이어 “‘엘베 정신’을 공평하고 건설적으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두 나라가 당면한 어떤 과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21세기 도전에도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 전쟁 때 냉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시동”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음. 이달 초 양국은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에 핵심 요소의 하나를 달성했음.

바. 중·일 관계

● “中, 올해 경제규모 日 추월한다”(4/29)

- 중국이 올해는 일본의 경제규모를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중국의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정신리(鄭新立) 부이사장은 28일 난징(南京)에서 열린 양안(兩岸)기업인 고위급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중국신문사가 보도했음.
- 정 부이사장은 “중국의 2009년 국내총생산(GDP)은 33조5천억 위안으로 5조700억 달러로 세계 2위인 일본의 96% 수준에 도달해 한 발짝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 예상치를 감안하면 올해는 반드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의 작년 GDP는 세계 1위인 미국(14조2천700억 달러)의 34.5% 수준으로 여전히 큰 격차가 있지만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 20년 뒤에는 미국도 따라잡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정 부이사장은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것은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 경제통계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1840년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은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었다”면서 “최근 100여 년간 서양은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한 반면 중국은 점차 퇴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21세기를 중국이 과거 명성을 되찾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규정한 정 부이사장은 “중국은 2009년 전세계 경제성장 공헌도가 50%를 넘어 설 만큼 세계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중화민족이 부흥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포착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 조어대 부근 탐사”(4/28)

- 일본의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 해저자원 탐사가 자칫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8일 보도했음.
- 관영 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통상 중국 정부가 나서기 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경고성의 미로 받아들여짐.
- 이 신문은 일본이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 역시 논쟁할 여지가 없는 자국 영토라고 맞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의 다오위다오 부근 탐사 계획으로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앞서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은 자국 정부가 다오위다오 부근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류큐(琉球) 열도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에 이르는 총면적 34만km²의 해역에서 희귀금속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해저열수광상을 본격 탐사해 2020년까지 사업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음.
- 희귀금속은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LCD TV를 제조하는데 필수 원자재임. 중국 외교학원의 저우용성 교수는 “일본 정부의 그런 계획에 중국 정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미 다오위다오와 관련해 일본과 분쟁이 있다고 밝혀온 만큼 (해저열수광상 탐사와 관련해) 일본은 중국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음.
- 저우 교수는 이어 일본 정부가 탐사를 강행할 경우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탐사범위가 소규모이면 막으려 하지 않겠지만 대규모일 경우 분명히 충돌이 야기돼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또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중·일 양국 간에 수년간 협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제 양자 대화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로 이를 넘겨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진린보 연구원도 “(다오위다오 부근 탐사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중국 정부와 대화를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사. 일·러 관계

● “日·러 영토문제 진전 가능성<마이니치>(5/2)

-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현) 영유권 분쟁이 양국의 정치적 이해가 접근하고 있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은 총리 자신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와 후텐마 문제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위기에 몰리고 있어 둘



- 파구 마련이 필요함. 또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야심작’으로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러시아판 실리콘밸리에 일본의 첨단 기술과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국은 연내 예정된 3차례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에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음. 하토야마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11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만나 영토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의 동시 반환을 요구해 왔음.
 - 하지만 영토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하토야마 총리가 기존 입장을 완화해 러시아와 협상이 가능한 하보마이와 시코탄섬을 먼저 반환받는 단계적 반환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음. 일은 하토야마 총리의 조부인 이치로(一郎) 전 총리가 1956년 당시 소련과의 공동선언에 서명하면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소련(현 러시아)이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기기로 했으나 일본은 2개 섬 반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쿠릴열도의 4개 섬 가운데 아주 작은 섬으로 하보마이의 경우 군도로 형성돼 있음.
 -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점령함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을 자국령으로 인식해왔으나 1945년 패망한 후 소련이 이를 지배해왔음.

아. 기타

● <긴박한 ‘천안함 외교’..유외교 내달 초 EU행>(4/29)

- ‘천안함 외교’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음.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판명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4강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 전반을 향해 다각도의 외교설득전을 전개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5월의 외교수첩을 빼곡히 채운 양자·다자 외교일정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천안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천안함 외교의 중심좌표는 북한 소행으로 판명났을 경우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임.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설득노력은 안보리행(行)에 대비한 일종의 ‘길 닦기’ 성격으로 볼 수 있음.
- 자연스럽게 우리와는 안보적 이해관계가 다른 중·러를 상대로 한 설득외교에 일차적 방점이 찍히고 있음. 특히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사건을 ‘남북 간 문제’로 규정하려는 분위기여서 우리 외교당국으로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당장 30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추후 천안함 사건 대응과정에서



- 의 중국의 협조 여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됨.
 - 유명한 외교장관이 28일 오전 장신썬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15분간에 걸쳐 독대(獨對)한 것도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행보로 비쳐지고 있음.
 - 다음달 15일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천안함 외교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외교 이벤트로 동북아 역내의 공동대응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무대로 우리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
 -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설득도 적극 전개되고 있음. 외교부 내 천안함 사건 대책반장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오전 비공개 방문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와 만나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29일 오전에는 러시아 외교부 마르글로프 아주1국장이 양창수 유럽국장 등 우리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면담을 가진바 있음.
 - 미·일과는 ‘공조 다지기’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 이달 초 방미한 위성락 본부장에 이어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0일부터 5일간 조 도노반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접촉했으며 양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일치된’ 시각과 접근태도를 공유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김숙 국정원 제1차장도 최근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는 올 상반기 중으로 ‘2+2(외교·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있음.
 -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3일 위성락 본부장을 만나 이번 사건의 대응방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돌아갔음.
 - 천안함 외교는 유럽연합(EU)으로도 향하고 있음. 유명한 외교장관은 다음달초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연설을 할 예정임. 특히 유 장관은 기본협정 서명을 위해 28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유럽연합 회의를 계기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 유 장관은 지난 18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 등 우방들과 양자적인 협조를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한중일+아세안, 쌀 78만7천t 비축 합의”(4/29)
-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이 쌀 78만7천t을 모아놓았다가 부족한 국가에 지원하는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를 만들자는데 사전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싱가포르발로 보도했음. 각국이 맡기로 한 쌀 비축량은 중국 30만t, 일본 25만t, 한국 15만t, 아세안(10개국) 8만7천t임.



- 일부는 실제로 창고에 쌓아뒀다가 인도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신속하게 운반하고, 남은 부분은 각국이 재고 중에서 부담할 수 있는 양을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운영비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이 100만 달러씩 400만 달러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고, 13개 참가국은 10월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3 농업 장관 회의’에서 정식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지원 물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매년 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비축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제도”라며 “요청이 있어도 여건이 좋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쌀은 참가국에 지원하고, 무상 지원 외에도 차관, 판매 방식도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아세안과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2년부터 역내 식량 안보에 공동 대처하자는 논의를 시작했고, 이후 시범사업을 진행했음. 하지만 2007~2008년 세계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쌀 부족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더욱 강화된 본 사업을 하자는 논의를 해왔음.

● 내달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첫 회의(4/28)

-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위한 첫 회의가 내달 6~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이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칙을 채택하고 3국 간 경제·통상 관계 및 각국 FTA 추진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우리 측은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 중국 측은 이사오준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오타베 요이치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 또 각국의 경제협회 및 학계 관계자 대표가 참석할 예정임. 한·중·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FTA 민간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음.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 정식 서명은 애초 전망했던 4월 말~5월 초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EU 측이 22개 언어로 작성한 협정문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정식 서명은 애초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음. 안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과 EU의 메커니즘상 잠정발효 조항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발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 태평양 해군력 강화 부심>(4/27)

- 중국이 남중국해를 비롯, 태평양에서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미국의 중국 군사전문 관리와 애널리스트



트들에 따르면 중국이 이른바 ‘먼바다 방어계획’에 따라 핵 잠수함 함대 구축에 나섰으며 항공모함도 진수시키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준비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의 해군력도 예상보다 빨리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7일 전했다.

-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특히 해군력 강화를 통해 중동지역 원유수출항구 주변 해역과 태평양 원유수송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호주산 철광석 및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자원의 안전한 중국 수송에도 해군력을 적절히 동원한다는 계획임. 이와 관련, 한 미군 고위관계자는 “중국 군 당국이 호주의 천연자원이 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잠수함을 통해 천연자원 운반선 호위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음.
-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적들이 날뛰는 소말리아 해상에서의 해군력을 강화해 왔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덧붙였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그동안 대만과의 불편한 관계 탓에 남중국해 진출에 적극 나서지 못했으나 최근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남중국해 및 태평양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이에 앞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지난해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해군력 강화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호주 연방정부는 국방백서에서 “호주군의 전력을 강화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 영향력 약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직 해군 간부 출신인 중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 해군력 강화는 호주와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음.



[참고 1] <표> 한·중 교역규모 추이(연합뉴스, 4/30)

<표> 한·중 교역규모 추이

구분연도	교역 규모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2	6,379,108	2,654,167	3,724,941	-1,070,775
1993	9,080,885	5,152,144	3,928,741	1,223,403
1994	11,674,505	6,211,656	5,462,849	748,806
1995	16,562,061	9,160,865	7,401,196	1,759,669
1996	19,932,687	11,394,119	8,538,568	2,855,551
1997	23,689,324	13,572,463	10,116,861	3,455,602
1998	18,427,948	11,943,990	6,483,958	5,460,033
1999	22,551,266	13,684,599	8,866,667	4,817,932
2000	31,253,268	18,454,540	12,798,728	5,655,812
2001	31,492,865	18,190,190	13,302,675	4,887,514
2002	41,153,365	23,753,586	17,399,779	6,353,807
2003	57,018,842	35,109,715	21,909,127	13,200,588
2004	79,348,049	49,763,175	29,584,874	20,178,301
2005	100,563,171	61,914,983	38,648,188	23,266,795
2006	118,015,853	69,459,178	48,556,675	20,902,504
2007	145,012,985	81,985,183	63,027,802	18,957,381
2008	168,319,172	91,388,900	76,930,272	14,458,628
2009	140,949,301	86,703,245	54,246,056	32,457,189

(자료=관세청)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5%90%ec%97%ad%ea%b7%9c%eb%aa%a8%20%ec%b6%94%ec%9d%b4&contents_id=AKR20100429189100002



[참고 2] 라오닝 성장 단둥역 진입..1급 경비(연합뉴스, 5/2)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반종빈, 김도일 기자 / 20100502

(bjbin@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5/02/0511000000AKR20100502075400083.HTML>